



전문가 인터뷰

볼프강 슈트렉(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소장)

박명준(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볼프강 슈트렉(Wolfgang Streeck)

약력

1946년 10월 독일 령어리히(Lengerich) 출생.
197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학 디플롬(Diplom).
1980년 동 대학 문학박사(PhD.)
1986년 독일 빌레펠트 대학 사회학 대학교 교수자격 취득(Habilitation).
1980년-1988년. 베를린 학문센터(Wissenschaftszentrum) 선임연구원 역임.
1988년-1995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노사관계학 및 사회학 교수 역임.
1995년-현재. 독일 쾰른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소장.
1999년-현재. 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서

Soci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1992), Korporatismus in Deutschland (1997) 외 다수.

활동

신조합주의 이론 및 노사관계 전문가로 세계적인 명성. 1998년 이래 독일 고용연대 벤치마킹 커미티 (Bndnis fr Arbeit Benchmarking Committee) 멤버. 노사관계 및 노동/경제 사회과학 관련 세계 우수 학술저널들 편집진에 참여 중

Q 먼저 고용연대(Bundnis fur Arbeit) 자문단에 참가했던 학자의 한 사람으로 고용연대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길 바란다.

A 고용연대는 독일의 정부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과 함께 - 물론 사용자단체도 함께 했지만 - 어떻게 고질화된 대량실업의 원인을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방안을 창출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시도였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강하며 잘 정립되어 있고, 사회민주당(SPD)은 언제나 선거시에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득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민당 정부가 노조로부터 ((노동조합의 이해에 반하는 실업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사민당 총리인)) 슈뢰더 수상은 ((고용연대를 통하여))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지지하도록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Q 슈뢰더 정부에서 고용연대가 끝내 실패로 마감된 이유는 무엇인가?

볼프강 슈트렉(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소장) / 박명준(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A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는 방대한 주제의 질문이다. 애당초 고용연대의 시도는 그렇게 오래 진행되지 않았다. 한 6개월여 진행되다가 사실상 사멸했다고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가가 노동조합에 맞서서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킬 수 있을 강력한 힘을 지니지 못했던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다.

여당인 사민당의 내부가 두 파로 분열된 것도 고용연대의 실패와 적지 않게 관련이 있다. 슈뢰더는 둘 가운데 우파의 대표이다. 1999년 초 재정부 장관이며 당시 당대표였던 ((사민당 내 좌파 지도자)) 오스카 라폰텐이 사임을 한다. 그 결과 슈뢰더가 사민당의 리더십을 넘겨받아야 했고, 그러면서 당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 이전에 슈뢰더는 대체로 중도의 입장에서 노동조합 친화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당 전체를 대표할 위치까지는 아니었다.

한편 1999년에 있었던 일련의 국회의원(Landestag) 선거에서 사민당은 상당한 수의 의석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이후 사민당은 점점 자신들의 핵심지지세력(노동조합)에 동조하는 쪽으로 당력을 집중하게 되었다. ((결국 노조친화적인 슈뢰더가 당대표를 맡게 되고, 선거에서 계속 실패하면서 사민당은 더욱 더 노조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그 결과 고용연대를 통한 개혁의 실현은 더욱 더 요원해졌다.))

또한 의회 내에서 사민당의 원내교섭단체가 슈뢰더 수상의 노선을 따르는 것을 상당히 꺼렸던 것도 문제였다. 지금은 슈뢰더가 ‘아젠다 2010’ 방안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원내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그는 의원들에게 4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강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는 4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당시였다면 사민당의 원내교섭단체 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개혁안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Q 그렇다면, 고용연대의 실패가 향후 독일에서 노사정 합의에 기반한 개혁정치의 추진 자체의 소멸, 나아가 신조합주의적인 노사관계에 기반한 개혁 전망의 상실을 의미하는가?

A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고용연대의 실패는 향후 오랫동안 독일에서 조합주의적인 정치가 상실됨을 의미한다. 영원히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적어도 향후 수년간 고용연대와 같은 식의 정치는 없으리라 전망한다.

노동조합은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다. 노조에게는 1999년과 2000년 무렵에 독일 복지국가의 재구성 과정에 참가해서 함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당시 노조는 그에 참여할 것을 거부했고, 결국 이제 독일의 복지국가는 노조 없이 개혁을 해야 하게 되었다.

볼프강 슈트렉(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소장) / 박명준(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Q 그러나 이번((지난 3월 마지막으로 고용연대가 열렸을 무렵))에는 노조가 개혁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나?

A 그렇지 않다. 이번에 노조는 그저 궁지에 몰렸을 뿐이다. 대체로 복지국가의 고용관계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시민당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노조와 함께 하는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노조에 반해서(혹은 노조를 빼놓고) 개혁을 하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시민당은 언제나 노조와 함께 개혁을 하려 한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원치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바 대로다.

원래 우리는 1998년에서 약 2000년까지 합의적(konsensual)인 방식으로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는 시도를 했으나 이는 실패로 끝났다. 그 이후 슈뢰더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경기가 좋아질 것을 기대했을 뿐이나, 이 역시 여의치 않았다. 그리고는 어떤 불가사의한 이유에서 지난 선거(작년 10월)에서 그가 재당선되었다.

기억하겠지만 작년 가을 슈뢰더의 재당선 이후 많은 유권자들이 적녹연정에 맞서 저항을 했다. 그들은 슈뢰더의 그럴싸한 언변이 그저 연기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다시 당선된 슈뢰더에게 이후의 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금처럼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을 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추진하는 것과 같은 ‘아젠다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이제 더 이상 노조와 함께 하는 방식이 될 수 없다. 그러기엔 이미 늦었고, 따라서 시민당은 이제 노조에 반하는 정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Q 그렇다면 1999년 2000년 국면에서 삼자주의(Tripartismus)를 통한 개혁이 성공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가?

A 그렇다. 당시 성공으로 갈 수도 있었다. 물론 쉽게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구조적(strukturell)인 요인이고, 또 하나는 우연적(kontingent)인 요인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당시 노조가 참여하는 성공적인 개혁도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기에 우연적인 변수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첫째, 당시 우리의 수상((슈뢰더))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 그저 표만 얻으려는 사람이었다. 독일에게 슈뢰더는 하나의 불운이다.

둘째, 가장 강성노조인 금속연맹(IG Metall)이 후계자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1999년 가을 위원장인

볼프강 슈트렉(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소장) / 박명준(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츠비켈이 부위원장으로 페터스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 IG Metall은 통제불능, 행동무능의 상태에 빠지면서 노조 내부적으로 완전히 갈라졌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산별노조인 베르디(Ver.di)가 출범한다. 이 역시 우연적인 요인으로, ((신생 노조인)) 베르디는 어떤 식으로든 내적인 규율을 과시해야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좌파적인 지향을 보여야 했으며, 결국 무대연기((이데올로기 편향))에 치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별로 달갑지 않은 ((정치 시스템 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등장한다. 독일의 수상은 대체로 연립정부의 내각을 이끌지만, 행정부의 각 부서들은 수상과는 자율적으로 작동을 한다. 지방의회 선거는 연이어 끊임없이 있고, 정당은 연방제의 논리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당은 이미 1999년 헤센 주에서의 선거에서 패배하기 시작, 결국 의회(Bundesrat)에서 다수당의 자리를 기민당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이 모든 사실들을 구조적인 요인으로 묶어서 보았을 때, 독일에서는 수상의 정치력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위기는 이미 1998년에 거대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당시 고용연대의 참가자들은 이미 스스로 이 위기를 알아차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더욱 확대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Q 슈뢰더의 개혁안인 ‘아젠다 2010’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용적으로 그것이 소위 ‘독일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고 보는가?

A 천만의 말씀이다. ‘아젠다 2010’은 기존에 나온 이야기들, 조치들의 혼합일 뿐이다. 이는 정말 전형적인 슈뢰더식 정치의 모양이다. 그는 그러한 조치들을 어디어디서 베꼈을 뿐이며, 왜 이래져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젠다’는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는 시민당이 관심을 두고 있는, 순전히 정치적·상징적인 행위다. 공론장에서 슈뢰더는 이제 정책을 실행시키겠다고 공언하지만, 뒤에서는 다르다.

내가 이미 주장했듯이, ‘아젠다 2010’의 큰 문제는 그 이름이 2010이라는 데에 있다. 이는 ‘아젠다 98’이었어야 했다. 현재가 2003년이지 않나. 지금부터 2010년까지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나? 아젠다는 정말로 이제 시작일 뿐이다.

Q 그렇다면 향후 개혁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는가?

볼프강 슈트렉(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소장) / 박명준(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A 알다시피 독일은 소위 ‘사회국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세금으로 노동 재정을 부담하는 매우 넓은 방식의 시스템이다. 그 기원은 근 100년 전 비스마르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수명은 66세였고, 연금수혜 연령은 65세부터였다. 따라서 당시 연금부담금은 매우 적은 액수였고, 그러한 세금으로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노동비용의 40% 혹은 33% 가량은 사회적 부담금(Sozialbeitraege)이다. 노동자가 1,600유로를 받으려면 사용자는 2,40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러한 부담은 신규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한다. 전체 사회국가의 개혁에 대해 당연히 많은 이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고, 지금의 정치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독일은 노동시장을 다시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사회국가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독일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를 구가했고 분명 지금도 부유한 나라이다. 그러나 현재 돈의 흐름을 잘 보면, 독일이 경제활동을 통해 버는 돈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요구들, 즉 연금을 비롯한 세금 등에 들어가고 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령인구의 필요를 위해 지불되어야 하고, 이는 그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자본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해가 갈수록 행복한 퇴직자들은 많이 나오겠지만, 더 이상 연구와 투자는 없다. 결국 노령자를 위한 필요를 채우면서 혁신의 잠재력을 도둑 맞고 있는 거다. 아직도 우리는 부유하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10년 후면 분명 많은 요소들이 붕괴될 것이다. 현재 지방재정들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여건들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결국 지나치게 많은 소비와 지나치게 적은 투자가 현재 독일이 처해 있는 핵심 문제라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요구들이 너무나 많고, 미래를 위해 사용되는 지출이 너무나 적다. 정치라는 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전환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Q 최근 발표한 논문들에서 당신은 적어도 독일에 있어서는 신조합주의적인 제도적인 틀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이는 신조합주의적인 제도가 일반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나, 아니면 독일의 특수성을 지적한 것인가?

A 어떠한 것도 보편적으로 유효한 것은 없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조합주의적인 정부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다. 세상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존재하며, 사람은 그 순간 실수를 할 수 있다. 어느 시점까지 잘 진행된 시

볼프강 슈트렉(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소장) / 박명준(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시스템이 이후에도 잘 진행될 수 있어 보이다가도 어디에선가 고장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이 시스템을 수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많이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것들은 정말 완전히 사멸해 버린다.

독일은 슈뢰더 정부 1기 4년간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잃어버렸다. 바로 독일의 조합주의적인 사회조직 시스템이 오히려 그 시기 동안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조합주의적 체제는 ((개혁에 반해서)) 단지 역사적으로 형성된 요구들을 방어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사회 전체가 고장이 나든가,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찾아내야 한다.

이론적으로 조합주의는 언제나 유효하다. 한 사회가 국가에 의해서만 통치되지 않고 제반 사회 집단들에 의해서 함께 작동한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생각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회가 잘못 작동하는 순간이 있는 법이다.

Q 독일의 노동조합이 복지국가의 폐기 혹은 재구성의 정치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가?

A 글썄다. 노조는 현재 스스로 위축되어 있다. 현재 보다시피 슈뢰더는 노조를 궁지에 몰고 있다. 계속 두고 볼 일이다. 현재로선 확실하게 뭐라 강하게 말하기 어렵다. 노조는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상황이다. 독일 사회 전체는 커다란 정체국면에 처해 있고 이미 부분적으로 ‘차단된 사회(blockierte Gesellschaft)’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이것이 꽤 오래 갈 수도 있고 본다.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즉시즉시 해결할 수는 없는 법이다.

Q 90년대 들어 신조합주의적인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럽의 국가들, 예컨대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등에서 삼자주의의 제도화를 통해 개혁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A 그렇다. 이미 내가 말한 바대로다. 이성적으로 우리는 국가, 노조 그리고 경제가 함께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사회를 성장과 진보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재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독일은 아니다.

볼프강 슈트렉(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소장) / 박명준(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Q 하지만 이는 하나의 아이러니 아닌가? 조합주의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개혁을 차단하고, 약한 조합주의적인 기반을 가진 사회가 오히려 성공적으로 조합주의적인 개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A 그렇다. 왜 독일은 스스로 역동성을 만들지 못하는 힘겨운 나라가 되었을까? 아마도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역시 덩치가 큰)) 프랑스에도 유사한 문제에 처해 있다. 이 점에서는 유럽에서 오히려 작은 나라들이 훨씬 잘하고 있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독일은 너무 지나친 성공을 누렸다. 성공을 거둔 나라에서 뭔가를 바꾸기란 그 역시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기존의 성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독일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내 또래의 50대 중, 후반 세대는 7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냈고 당시 독일은 정말 대단한 성공 시대를 구가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20~30년 전에 작동했던 그 시절의 기제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려 하지 않는다.

이제 다른 경험을 하면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젊은 세대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시민당만 보더라도 슈뢰더보다 연배가 낮은 세대들 가운데 뚜렷한 정치적인 인물이 없다. 기민당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거대한 덩치는 정체된 사회를 낳았지만,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성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Q 한국에서는 지난 1997년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노사정 삼자합의에 기반한 자유화 개혁을 시도해 오고 있다.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여 그 역할의 대폭적인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의 실패의 교훈과 유럽 다른 나라들에서의 삼자주의의 부활의 사례가 한국과 같이 제도적 기반이 약한 후발 자본주의국의 사회발전에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한국의 사회협약의 정치에 충고를 해 준다면?

A 한국에 대한 진단은 당신의 과제이다. 현 시기 대체로 삼자주의적인 정치를 구성(Konfiguration) 하는 데에 있어서 관건은 ‘합의적인 자유화(Konsensuelle Liberalisierung)’를 이루는 것에 있다. 이는 사회적 응집력(Zusammenhalt)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정치를 통해 시장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은 시장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노조의 정치는 이러한 결과를 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요한 것은 ‘합의적인 자유화’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를 생각해 보자. 그 나라에서는 아마

볼프강 슈트렉(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소장) / 박명준(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도 사람들 모두가 국가로부터 똑같은 몫을 받고,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등의 제도를 지닌 ‘사회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처럼) 사회가 부유해지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몫을 돌보아야 한다. 내 때에는 대학을 다니면서 돈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내 아들 세대에서도 그러하다. 나는 이 점을 이해할 수 없다. 독일 사람들은 대학은 언제나 무료이어야 한다고 하는 관념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의 대학은 현실사회주의의 모습처럼 되었다. 모두 똑같이 받고, 아무도 아무를 돌보지 않는다. 고객은 주어진 것만 받게 되어 있고, 무엇을 받을지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부유한 사회에서 고객들은 분화된 욕구를 지닌다. 동일한 몫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국가를 한편으로는 자기책임과 분화된 능력 그리고 자율적인 참여에 맞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적인 안전망을 적절히 유지하는 쪽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그 낮은 수준이 어디까지가 되어야 할지가 문제일 것이다.

아일랜드, 스웨덴 등에서는 복지국가의 자유화를 향해 펴 잘해 가고 있다. 한국도 아마 자유화를 향해 가는 와중에 사회협약을 체결한 거 아닌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는 정치적 기술, 리더십, 전 사회가 낙관적일 수 있는 좋은 바탕, 미래를 함께 성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신감 고취 등이 중요하다.